

데스크칼럼

박정렬

사회부 부국장대우

상생이란 단어를 광주·전남처럼 흔하게 쓰는 곳이 또 있을까. 영어로는 ‘win-win’, 한자로는 ‘相生’으로,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전남 메가시티, 호남권 메가시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등 형식은 달리 하지만 두 지역의 상생에 방점을 찍고 추진한 정책들이다. 줄어드는 인구수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다. 모두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단어들이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이유는 구호에 비해 성과물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일 것이다. 상생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고 추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나주에 들어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좋은 사례를 살려 광주·전남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군공항 이전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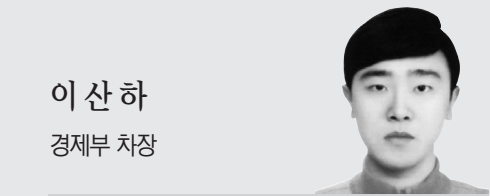
김지후

전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추진한 생태전환 글로벌 리더십 국제교류를 통해 돈을 주고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정은 두 가지이다. 자전거 투어와 덴마크·아이슬란드 고등학교 방문이다. 첫째로, 자전거 투어를 하며 덴마크에서 생태전환의 선두를 달리는 나라다운 모습을 실감했다. 외국에서 자전거 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고 드문 일이지만 자전거의 나라 덴마크에서 경험한 것이기에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곳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깨끗했으며,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어떻게 이런 자연의 향기가 날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와 질서정연한 수신회들이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도로 위의 자전거 이용 비율도 자동차보다 훨씬 높았다. 그 모습은 국민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문화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수첩

하루빨리 의료 정상화 이뤄지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의료·교육 현장을 1년 6개월가량 떠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지방 의료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막심했다. 갈등 이전부터 이미 위기에 봉착해 있던 지방의료 인프라는 의료계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도서 지역의 공중보건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에는 극심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료공백을 메우지 못해 환자 진료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상생’의 무게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의 이슈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5극3특’ 전략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 8월 27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 후 9월 8일 광주시청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현판을 내걸었고, 10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다른 한 축인 전남도의회에서 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설령 추후 도의회에서 통과 되더라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양 시·도와 의회가 정책 결정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불요불가 고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선거에 나가 당락을 놓고 상대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시·도지사와 광역연합 의회에 소속될 시·도 의원들이 광역연합과 지방선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는 자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정치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민감한 양 시·도의 정책결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광역연합 구성원의 변동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를 목도했다. 이는 의도는 좋지만 시기적으로 정치의 계절에 들어선 현재 광역연합이 순항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례안 등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광역연합이

생태전환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광주교육

직접 자전거를 타고 체험해보며, 이러한 생활 방식이 환경 보호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페달을 밟으며 맞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생동감과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삶의 태도’로서의 자전거 문화가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전거 문화가 더 확산돼 사람과 환경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둘째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고등학교를 방문하며 현지 학생들과 교류한 경험은 큰 인상으로 남았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조금 낯설었지만, 대화를 나누며 그 벽은 금세 허물어졌다. 서로의 학교생활과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웃고 공감하는 순간, ‘외국인 친구’가 아닌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친구’로 느껴졌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들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고, 나 또한 내 삶과 우리 문화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그곳 학생들에게 나의 생각을 소개하면서 ‘나 역시 변

구성돼 실제 사무를 시작하는 시기가 양 시·도의 목표대로 내년 1월 1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의회의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면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에는 정부가 종전의 시·도 단위 사업예산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시·도를 연계·통합하는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광역연합 출범 시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실제 충청광역연합의 사례에서 보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2023년 1월 출범해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2024년 12월에야 사무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광역연합은 9월 추진단이 출범해 단 4개월만인 내년 1월 1일 사무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충청권 사례에서 보듯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상생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주·전남이 협력해 좀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목표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상생을 목표로 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이전 여러 사례와 같이 구호로 소비되지 않고, 320만 시·도민의 절대적 지지와 응원 속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이 될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그만큼 상생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와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 단순히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됐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에서 본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리고 두 나라에서 마음 깊게 느낀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의 5·18 민주 인권 정신을 세계에 알렸다는 자부심도 컸다. 이러한 경험은 내 삶의 방향과 자세를 분명하게 해줬다. 나는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고, 그 활동의 리더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학교생활 속에서도 환경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자 한다. ‘변화의 시작점은 우리 자신’이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이번 국제교류는 나에게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라, 내 태도와 미래의 꿈을 바꾼 전환점이 됐다. 글로벌한 프로그램으로 나의 안목을 세계화 시켜준 광주시교육청에 이 글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값진 교육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

도로 보수공사 작업인부 안전 보장

시통팔달 교통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이동수단인 자동차 또한 도로를 막힘없이 질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좋아진 도로 주행환경에 과속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중앙분리대 주변이나 도로 갓길 등에서 수목이나 잡초 제거 작업이나 각종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통행차량이 많은 고속도로, 국도에서는 특히 작업 인부들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 이들 대부분의 작업들이 고속주행이 이뤄지는 도로라 보니 근로자는 작업 중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운전자 입장에서 커브길이나 안개가 끼었거나 사물식별이 흐릿해지는 시간대에 공사구간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기 쉽다. 도로 작업 인부에 대한 인명피해 사고는 전방주시 태만 등 사소한 안전준전 수칙 미이행에서 비롯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도로에서의 작업 인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필요하지만 작업자를 또한 안전 생활화, 습관화가 우선 돼야 할 것이다. 김택형 청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사설

벼랑끝에 몰린 ‘지방대’ 살릴 방법은 없다

지방대학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공개한 대학교육연구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168명으로 2010년 57만1141명 보다 21.4%인 12만1973명이나 줄어들었다. 이 기간 수도권 대학 정원은 20만5821명에서 18만1489명으로 11.8%인 2만4332명이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36만5320명에서 26만7679명으로 26.7%인 9만7641명이 감소했다. 즉, 감축 정원 12만1273명 중 80.1%가 지방대학이라는 얘기다. 감소폭은 강원권(32.7%), 제주권(32.6%), 부산·울산·경남권(30.1%), 호남권(29.8%) 등 순이었다. 이처럼 비수도권 중심으로 입학정원 감축이 진행되면서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은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어난 반면 지방대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 추세속에 올해 45만7000명이던 대학 진학 학령인구(만 18세)가 2045년이면 23만명으로 절반가량(~49.3%)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대, 특히 사립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경우 사립대 등록금은 1년 차에 1조5000억원, 4년 차에는 3조8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심화되는 지방대 정원 감소가 지역 경제의 고용, 소비, 인프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내 고용, 임대료, 상권 매출 등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고 대학 캠퍼스 인근의 음식점, 상점 등 상업 인프라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우수 학생의 수도권 이탈로 지역 인구가 줄고,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사회 활력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방대 정원 감소가 단순한 학생 수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재정보전 등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대는 물론 지역도 생존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역 연탄사용 가구 ‘후원의 손길’ 절실하다

최근 찾아온 ‘반짝추위’로 연탄을 때는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걱정된다. 이번 겨울, 북극 해빙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느 해보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까지 돼 있다. 발상공동체연탄은행이 발간한 ‘2025년 전국 연탄사용가구조사 결과’를 보면 해마다 줄고 있는 연탄 사용가구는 전국적으로 6만 가구가 있다. 광주는 821가구인데 이중 기초수급자 92가구(23.3%), 차상위 26가구(3.1%), 소외계층 389가구(47.3%) 등 73.9%가 취약계층이다. 전남도 2577가구인데 기초수급자 649가구(25.1%), 차상위 185가구(7.1%), 소외계층 1352가구(52.4%) 등 취약계층이 84.8%다. 이들 대부분 넉넉지 않은데 연탄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장당 400원하던 연탄 소비가 가격은 지난해 장당 900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다. 2008년 400원에서 2009년 500원, 2016년 600원, 2017년 700원, 2018년 800원, 2022년 850원, 지난해 900원 등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광주는 지난해 4월 유일무이한 남선연탄 폐업으로 연탄공장이 없어 전북 전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연탄을 사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비가 붙어 광주 1000원, 목포·여수 등 1300~1400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한다. 문제는 연탄을 후원하고 봉사하는 온정의 손길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는 데 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나눔 돌볼 여유가 없어서인지 연탄은행에 들어오는 지역 후원이 예년에 비해 뜸해졌다. 지난 겨울에 받은 3만여장의 연탄 후원도 이들의 겨울나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 말이다. 연탄 가구의 경우 1구 3탄 기준 하루에 3~5장의 연탄이 필요해 6개월 기준 1000장이 있어야 겨울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이들에게 에너지바우처 쿠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년에 500~600장 정도에 불과하다. 따뜻한 이웃의 후원이 있지 않으면 이들의 겨울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점점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돼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시·도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www.GwangNam.co.kr

| 회장 양진석                                                                                                                                        |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 주필 김상훈 | 편집국장 최현수 |
|-----------------------------------------------------------------------------------------------------------------------------------------------|--------------|----------------------------------------------------------------------------------------------------------------------------|--------|----------|
| <b>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b><br>우편번호 61234<br>대표전화 (062) 370-7000<br>팩스 (062) 385-5400                                                             |              |                                                                                                                            |        |          |
| 1995년 12월 12일 창간<br>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              | 정 치 부 370-7010<br>경 제 부 370-7020<br>사회교육부 370-7030<br>지역사회부 370-7040<br>문화체육부 370-7234<br>편 집 부 370-7082<br>사 진 부 370-7050 |        |          |
| 는 설 실 370-7060<br>뉴미디어본부 370-7222<br>임 원 실 370-7000<br>총 무 국 370-7093<br>사 업 국 370-7090<br>광 고 국 370-7070<br>독자관리국 370-7080<br>서울지사 ☎978-7090 |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